

현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방향과 무용계에의 시사점*

박재홍** 한성대학교

본고에서는 문화예술계의 요구사항, 공약, 공표된 국정과제를 통해 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큰 그림을 살펴 보고 무용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정성회복, 문화협치, 예술인복지, 문화 분권, 여가시간의 확보, 문화재원의 마련 등이 문화계가 요구하는 내용의 키워드로 나타났다. 국정과제를 통해 살펴 본 현 정부 문화예술정책 관련 공약은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지원 공공성을 위한 제도의 정비' 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 문화예술 정책 방향이 무용계에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치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여 전략적으로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생활문화와 참여 예술가에 대한 관점 변화를 이해하고 생애주기별 및 대상별 문화예술교육과 기초 단위의 문화마을 등 무용계 일자리와 복지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 무용단체를 활용한 전문무용교육과 교육현장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 : 문화예술정책,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교육, 무용계 발전방향, 무용계 선순환 체제구축

I. 머리말

지난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제19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하여 최근까지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직책의 인선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나, 문화예술계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장관을 중심으로 비교적 정권 초기부터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지된 바와 같이 전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포함해 문화예술계의 많은 문제가 표면에 떠올랐으며,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요구 또한 그에 상응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문화체육부는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 혹은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여 왔고, 정부는 지난 7월 19일에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앞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를 공표하였으며 문화예술 관련해 7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전통적인 공연예술 분야는 전형적인 시장의 원리 하에서는 성공하기 힘들다. 공공재 가치를 지닌 영역으로 국가의 문화정책을 통한 장기적인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Baumol and Bowen, 1966). 이는 사람이 주축이 되는 순수예술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공연예술을 넘어 문화예술 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술가 역시 국가의 문화정책을 알아야 할 이유이자, 역으로 국가의 문화정책이 예술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무용 현장에 있는 연구자로서 현 정부에 바라는 문화예술계의 요구와 공표된 문화예술분야 국

* 이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았음.

** 교신저자 jhpark@hansung.ac.kr

정과제를 살펴보고, 무용분야에서 이러한 큰 틀의 정책방향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II. 새 정부 문화정책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 민주당 문화공약을 통해 자율, 분권, 그리고 협치를 기본적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 협치를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누리는 문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으며, “1. 전 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2.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3.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4. 일상에서 문화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5. 창작·유통이 상생하는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6.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으로 문화유산 가치 제고, 7.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문화균형발전, 8.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스포츠 복지국가, 9. 쉽표가 있는 삶, 관광복지사회 실현”이라는 9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더불어 민주당 공약에 대해 지난 6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문화사회를 향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원재(2017)는 문화정책의 구조와 쟁점들을 잘 파악하고 다양한 분야에 현실감 있게 접근했고 예술인 권리 증진에 대해 개선의지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문화행정 혁신과 관료주의 해체를 위한 구조적인 개혁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약의 전체적 방향과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방안과 체제의 변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 없이는 선언적인 공약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 직후 언론과 토론회를 통해 새 정부 문화정책 수립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요구들을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1. 공정성 회복

현 정부 문화공약 첫 번째도, 문화예술계 첫 번째 요구사항은 역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에 대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 전체 규모는 예술검열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었으나 역설적으로 양극화는 심화되어 예술시장 및 지원제도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예술생태계 안정화를 위한 최우선적 해결 과제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이규석, 2017). 비교적 산업화가 진행된 대중문화와 미디어 부문에서도 최승훈(2017)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문화산업 정책은 대기업, ICT, 유통·플랫폼, 미디어 주도의 양적·외형적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산업구조의 양극화와 불공정행위 견제장치를 해체로 이어졌으며 지원기구 통폐합으로 관리형 산업지원체제를 구축해 정치적 목적도 실현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공공성 회복의 첫 단추를 관련 정부기관의 체제 정비와 독립성 확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당초의 취지와 달리 예술계를 통제하는 정부의 영향력 행사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은 문화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체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대상이 예술정책임을 감안할 때 문화예술위원회는 문체부의 권력과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예술가와 일반국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187).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기관을 관장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이하 기관은 간접적으로 모니터링만 하는 구조로 만들어, 예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민간협의기구화 하자는 것이다(그림 1).

Niskanen(1994)은 그의 공공지출 예산극대화 이론을 통해 관료는 재량적 예산의 잉여재원 일부가 증원,

자본, 시설의 구입을 통해 해당 관료들의 간접적 이익에 기여하므로, 재량적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증가하는 재정지출의 상당부분은 관료조직과 정치세력의 특수이익에 기여할 뿐 서비스수준을 개선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지출이 공공수요의 증가율보다 빨리 늘어나더라도 잉여 전리품을 배분할 수 있는 체계를 없애지 않는 한 민간이양을 통한 효율성 제고나 정부감축은 불가능하다는 니스카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김중순, 2001).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성의 회복과 지원체제와 방식을 개편하는 것이 연관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해된다. 기존 제도에서의 정책과 취지는 같으므로, 체제 형식의 변화가 실행 수준과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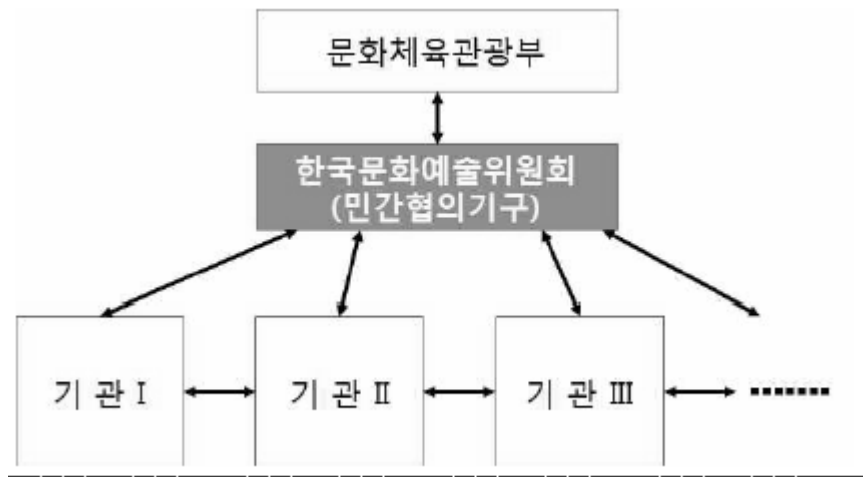


그림 1. 통합적 문화예술지원체계 구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2. 문화협치와 체제 구축

정부와 문화예술계의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높다. ‘협치’의 의미를 단순하게 이해하자면 정부가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한 후 평가하는 각 일련의 과정에 수혜자인 예술인과의 상호 협의 하에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쌍방향 소통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자생적 필요에 따른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규석(2017)은 그간 우리 고유의 예술현장에 바탕을 둔 문화정책이 아닌 외국의 사례를 모방한 외부 이식형 문화정책의 적용 문제를 지적하고 예술정책의 혁신을 위한 출발점은 사회적 소통과 합의를 통한 문화정책의 방향설정과 거버넌스형 예술행정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 예술인 복지

우리나라 문화산업 분야가 정부의 핵심 산업정책에 포함된 것은 김영삼 정부가 ‘문화산업국’을 문화부에 설치하고 문화산업을 통한 경제개발을 추구하기 시작한 이후로, 문화예술을 지나치게 경제 논리 위주로만 전개하면서 구성원들의 복지나 인권 등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진달용, 2017). 새 정부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약화시키자는 것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소외된 예술인들의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창작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의 복지와 인권을 사회 전체의

발전과 균형 있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제도의 장르별 편차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규석(2017)은 예술인복지제도와 관련해 현행 예술인복지제도가 근로계약에 기반하고 있는 공연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문학이나 시각예술 등 자영예술가 전반에 대한 구조적 소외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4. 문화분권, 문화 민주주의

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지원체제와 감독기관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성' 회복을 위한 관점이라면, 문화분권은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간 격차의 해소 혹은 중앙과 지자체의 위계구조의 개선, 그리고 문화민주주의는 생활문화 혹은 상향식 문화예술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관점의 피력이라고 할 수 있다. 김종휘(2017)는 지역분권과 지역민주주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촉진하는 문화분권과 문화민주주의로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를 추진해야 할 때이며, 앞으로의 문화정책은 내부적으로는 분야, 장르, 계층 등 나눠 설계하더라도 그 총괄적 추진과 최종적 효과는 '지역화'와 '협치'라는 두 가지로 관통할 수 있게 사전 기획하고 사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요구들은 중앙과 지역의 위계적인 체계가 아닌 시민이 참여하는 수평적, 상향식 의견수렴을 통한 문화정책을 수립해 실행하고 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 구성부터 지역화와 협치를 반영한 설계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5. 여가시간의 확보와 자원마련

OECD의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긴 반면,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구매력평가 기준 실질임금은 OECD 중하위권 수준에 불과하다(연합뉴스, 2017.8.16.). 긴 근로시간과 실질적 소득의 정체가 모두 관광, 여가, 문화예술에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동시간을 줄여 공연관람, 여행과 독서, 다양한 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문화권리가 생활문화로 실현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이동연, 2017). 더 많은 국민을 문화예술에 참여시키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기존의 방식, 다시 말해 단순히 예술을 시민이 향유하게 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 중심의 참여형 문화활동을 기반으로 체제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있다. 문체부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주말의 여가시간이 10년 전 5.5시간에서 줄어든 5시간, 여가활동 1위는 TV시청(46.4%), 동호회 활동유형 1위 등산(12.3%)의 주계층이 50대(17.8%)의 '혼자서'(59.8%)라는 현실을 근거로 한다면 생활문화정책에서 시민을 활동의 주체로 육성하면서 예술 및 비예술 영역으로 결합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이다(김종휘, 2017).

현 정부의 문화예술 공약이 큰 틀에서 기존의 문화예술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전제할 때, 새로운 문화정책의 수립과 실현의 핵심은 정책의 실행 체제의 정비와 필요한 예산의 확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1973년부터 징수해 기초예술 지원의 중심 재원으로 사용되어온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03년 위헌결정으로 징수 폐지되어 2017년경부터 정상적인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나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다(이규승, 2015). 2014년 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을 요청한 바 있고, 카지노업 매출액의 2%를 문예기금으로 출연해 기초예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으나 모두 무산되면서 실질적으로 고갈을 막는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었다.

III. 현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현 정부는 문화공약에서 그간 유지되어 오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공공지원 공무에서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문화예술지원에서도 유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팔 길이 원칙’의 본래 사전적 의미는 “당사자들이 거래에서 독립적이고 동등한 입지를 갖는 조건 혹은 사실관계”를 의미한다(미리엄웹스터 사전, 2107). 예술지원에서는 1945년 영국에서 예술평의회(Arts Council)를 설립하면서 예술과 정치 사이에 거리를 두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고, 지원은 하지만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를 의미한다(연합인포맥스, 2017). 문화예술지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외에 문화예술지원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 지원배제를 통한 예술계 통제를 원천적으로 막아 공정성을 확보하며, 고갈되어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국고에서 충당하고, 예술인 실업급여를 통한 복지 확대하며 유희 시설을 활용한 창작 인프라를 조성한다고 공약하였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전략 4 :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그림 2.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문화국가 관련 국정과제(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그리고 현 정부는 지난 7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부분은 총 5개의 목표 중 3번째 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전략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 이중 문화예술(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이는 것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68.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의 2개로 보이며 간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보이는 것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확산”,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의 3개로 파악된다(그림 2). 무용 영역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는 국정과제 67과 68을 함께 제시된 주요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1.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국정과제 67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이다(표 1). 선거공약에서는 지역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마련해 폐산업시설이나 유휴시설을 활용한 지역 문화재생 사업을 지원하고 문화도시로 지정하여 활성화한다는 공약이 있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지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 확대 및 지원금액 현실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시행, 동네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특히 독서 진흥을 위한 공공도서관을 확충과 장서 구입을 추진과 출판문화 활성화 체제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표 1. 100대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문체부)

과제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확보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 저소득층에게 연간 6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21년부터 10만원 지급 ○ (국민 문화예술 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22년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 360만명 달성 ○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문화마을(읍면동 단위 중심) 신규 조성 추진 ○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 도입으로 '22년까지 연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지속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돌봄법(가칭) 제정으로 상시관리 대상 문화재 지속 확대 - 전통무형문화의 원형보전 강화 및 국민적 향유를 위한 지원 확대 -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 ○ (문화재원 확대) 연차별로 문화분야 재원 적극 확대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5% 달성'(16년 78.3%) ○ '22년까지 문화기반시설 3,080개 조성'(16년 2,595개) 등으로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 마련

* 출처: 100대 국정과제(국정운영자문위원회, 2017)에서 일부 발췌 편집하였음.

주요내용에서 무용분야와 직간접으로 관련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국민문화예술 역량 강화와 지역 간 문화균형발전’으로 선거공약의 내용이 큰 틀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 문화예술 역량 강화”에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선보인 바 있는 기존의 정책을 확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에서는 문화마을(읍면동 단위중심)의 신규 조성이 주목된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폐산업시설이나 유휴시설의 활용한 지역문화재생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읍면동 단위라는 것을 감안하면 생활문화 동아리 활성화 공약에 대응하는 과제로 이해된다. 현 정부의 공약에서는 각 지역의 가용공간을 활용해 창작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레지던스형 인프라 확대, 생활문화를 확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청년예술가들에게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 지역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일자리를 제공이 제시된 바 있다.

2.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강화로 예술인의 저작권 보장

국정과제 68.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강화로 예술인의 저작권 보장의 과제목표는 예술가의 고용과 복지를 위한 ‘법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표 2). 이와 관련된 주요내용으로는 “예술인 권익보장”에서 지원공정성과 권리확보를 위한 법률제정을,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에서 공정한 고용 체계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상기 내용이 이미 기존에 제시된 것들이라는 측면에서, “예술인 복지강화”에서 2019년부터 예술인고용보험 제도시행 및 보험료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파악된다. 현

재 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대상과 규모가 제한적이므로, '예술인'의 정의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예술인 복지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 공약을 통해 예술인을 위한 긴급지원시스템(긴급생활자금, 상해)을 마련하고, 예술인의 경력과 활동에 따라 표준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의 추진이 제시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토론회'에서 현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랑스의 공연·영상 분야의 비정규직 예술인을 위한 실업급여제도인 '엔테르미탕'(Intermittent) 유형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엔테르미탕의 강제가입 방식이 아니라, 예술인 70%가 원하고 있는 '임의가입'방식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프리랜서 예술인까지도 실업급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이다(정향미, 2017).

표 2. 100대 국정과제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과제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예술인 권익 보장) '17년 공정성 협약 발표, '18년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등을 통해 예술지원 공정성 확보 및 예술인 권리 강화 ○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18년 문예기금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표준계약서 의무화,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공연, 미술) 지속 추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복지 강화)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19년부터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시행 및 보험료 지원 ○ (문화예술진흥기금) 단기적으로 일반예산, 복권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원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적으로 타 기금이나 수익금의 법정전입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마련방안 강구 ○ (국민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체계 구축) 지원기관 독립성 확보, 심사투명성 확대, 현장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및 문화옴부즈맨제도 도입 등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 및 예술 발전 도모 ○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보급 및 의무화 확대,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분배기준 강화 등으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 출처: 100대 국정과제(국정운영자문위원회, 2017)에서 일부 발췌 편집하였음.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단기적, 중장기적 무엇보다도 '안정적' 재원마련을 언급한 것은 선언적일지라도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예술지원 정책을 보완 확대 시행함에 있어 재원마련 없이는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지원의 주요 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고갈되었다는 것이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국고 출연을 확대하고 체육·관광기금에서 일정 부분 전출하는 방안이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 예산편성의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국민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체계 구축"은 지원 공공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정성 확보와 분권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체제 정비에 대한 것은 공표된 바 없다. '팔 길이 지원'의 정책 기조는 과거부터 일관성 있게 천명되어 왔으나 실상 그러하지 못했고, 현 정부는 공약을 통해 공정성 취지를 공고히 하는 실제적 방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문화부 산하 지원기관의 의사결정을 문화부로부터의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치적 간섭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기관장 임명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 예술인들의 참여와 추천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기금지원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심사위원회와 결과를 공개, 이의제기 옴부즈맨 제도를 마련도 공약에 제시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위원장과 임기 중인 무용위원을 제외한 각 장르별 위원 공고를 시행해 임명되기도 하였다.

IV. 무용계에의 시사점

100대 국정과제를 살펴보고 무용계와 관련해 현 정부 문화정책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간접적으로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제정’,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마련’,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기관 지위와 역할의 정비’, ‘예술인고용보험’, ‘지역 간 문화균형발전’, 직접적으로는 ‘생활문화진흥’, ‘문화마을’,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단체 표준계약서 의무사용’ 등이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무용계에 의미하는 바를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하였다.

1. 협치: 적극적인 토론 참여와 전략적 의사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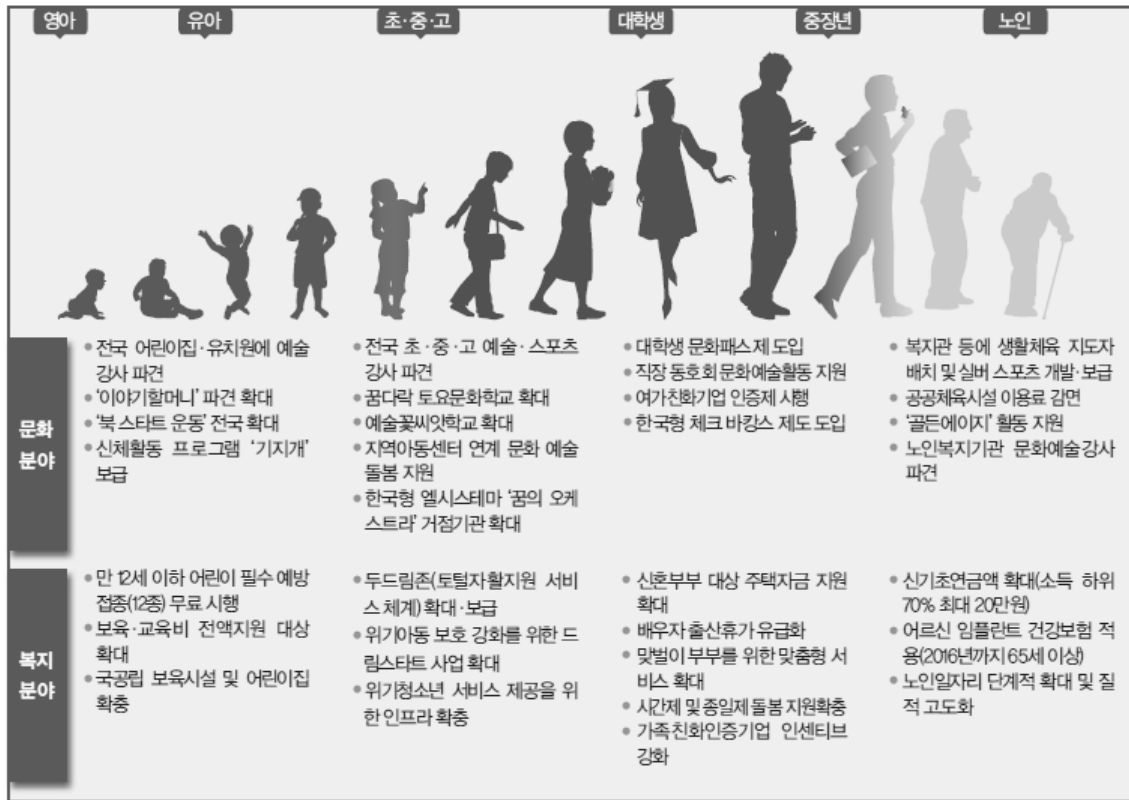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문화체육관광부 이하의 위계적 문화행정구조를 수평적 ‘협치’ 체계로 재편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었고, 블랙리스트로 문제가 된 문화예술위원회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위계적 위상과 역할에서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지원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지난 8월 3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는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정책 포럼’에 도종환 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해 문화예술계의 정책제안이나 문제 제기를 청취한 바 있고, 앞서 7월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으로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가 3차에 걸쳐 진행된 바 있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의 세부안 수립과 시행에 있어 무용계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일은 위와 같은 논의의 장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발적인 의사개진 보다는 전략적 의사개진이 필요할 것이다. 무용 장르는 관련 행사 및 교육에 참여한 향유인구가 문화예술분야 중에서 무용부문이 가장 적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따라서 정부정책의 협의나 논의의 1차적 대상이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용분야 내부의 전략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합의된 의사는 전략적으로 개진함으로써, 예견되는 ‘협치’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무용계의 발전을 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생활문화와 참여 예술가의 관점 변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문화마을

생활문화와 대상별 문화예술교육도 새로운 개념의 정책이라기보다 기존 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문화재단과 같은 지자체 문화재단은 최근 공공기관을 활용한 동호회 활동지원, 유휴시설을 활용한 예술활동 인프라 구축, 전문예술과 비전문예술의 경계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시행된 문화예술교육도 최근 예술강사의 4대 보험과 지원축소가 문제가 있었으나 그간 대상별로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해왔다. 다음의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생애주기별 문화복지정책에도 해당 내용을 볼 수 있다(그림 3). 이러한 방안이 새로운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정과제 전반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전보다 확대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 생애주기별 국민공감 정책



자료: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3. 2014년 발표된 문체부와 보건복지부의 생애주기별 국민공감 정책

문제는 전반적인 문화예술 영역이 확대되는데 비해 무용의 영역 또한 비례하여 확대되느냐이다. 김대중 정부 이후 문화예산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문화산업화에 치중되었지 순수 그것도 향유인구가 가장 적은 무용분야로 흘러들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무용분야에서는 기존의 무용콘텐츠를 정책 방향이나 다양한 대상에 맞게 수정해 활용하거나 혹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동호회 중심의 생활문화와 생애주기에 따른 대상별 문화예술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참여 방향에 대해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 활성화, 그리고 지역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청년 예술인 일자리를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생활문화'나 '생활예술'의 개념에서는 예술가가 아닌 시민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러한 시민 생활문화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는 창조자나 전수자라기보다 협력자, 조력자,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회적 관계의 구축이 있어야 한다. 각 지역의 인구와 문화적 특성을 잘 파악해 청년 무용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과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과 함께, 참여 예술가의 관점 변화와 준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표 3>은 정부24에서 '문화예술지원'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사업 중 2017년 8월 이후 게시되어 무용에 직간접으로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목록이다.

표 3. 정부24에서 검색한 무용관련 문화예술지원 사업 (2017.11.27.)

주관처	사업명	지원의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소모임에게 소셜모임 활성화 역량강화 및 지원금 지원(문화가 있는 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의 특색 있는 장소콘텐츠 활용 국민문화 향유프로그램 제공(문화가 있는 날)	생활문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근로자에게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문화가 있는 날)	장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	
문체부문화예술교육과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지원	
문체부문화여가정책과	소수 문화계층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무지개다리 사업)	
문체부공연전통예술과	소외계층 문화순회 지원	소외계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신규 순회프로그램 제공	문화향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문화이용권 지원	권리증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저소득층 공연티켓 무료 및 할인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일반시설 문화향유 순회프로그램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동시설 문화향유 순회프로그램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인시설 문화향유 순회프로그램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특수계층시설 문화향유 순회프로그램 제공	지역순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농산어촌 지역주민 문화향유 순회프로그램 제공	문화격차 해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장애인시설 문화향유 순회프로그램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소년시설 문화향유 순회프로그램 제공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역문화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나눔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만35세 이하 차세대예술가 창작지원비 지원(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문화예술인의 공연기회 사례비 및 국민의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 제공(문화가 있는 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기획·경영분야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예술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대기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졸업자 인턴연수 인건비 지원(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문무용수 직업전환 교육비 및 상해치료비 지원	

* 출처: 정부24 '문화예술지원' 키워드 검색 (2017.11.27.) 한 내용을 편집하였음.

한편,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작활동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스튜디오와 같이 상대적으로 큰 공간을 요구하는 무용 장르는 이러한 시설 인프라를 무용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전문 무용단체를 활용한 무용교육과 고용의 선순환 체제

위에서 살펴본 국정과제에서는 기초예술의 진흥을 확대 지원한다는 취지를 언급은 없고 다만 공정한 지원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는 것은 기초 예술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금에 민감한 무용계로서는 앞으로의 지원 체제의 구성과 방향에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무용 영역의 활동 규모를 살펴볼 때, 국립, 시립 무용단과 일부 사립 무용단을 제외한다면 전문단체 활동 중심이 아닌 학교 중심의 아카데미즘에 기반을 둔 활동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온 것이 사실이고, 종사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취업 출구의 축소로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전문단체도 순수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사회 속으로 진출하려는 많은 노력이 알려지고는 있으나, 그 수가 제한된 현실에서 양과 결과 역

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초 예술지원 차원의 지원에 국한하기보다 기관이나 단체차원에서의 지원 확대를 조직하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무용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무대활동은 태생적으로 집단적 활동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을 비추어 볼 때, 각 지역 간 문화편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각 지역에서의 거점 전문 무용단체를 추가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면 이는 무용계를 미래를 위해 말할 필요 없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전문 무용단체가 설립된다면 순수예술활동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언급된 생활문화와 다양한 대상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무용 중심의 다양한 문화예술콘텐츠가 축적될 것이고 이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무용은 이미 민속무용을 극장으로 유입해 콘텐츠화한 역사를 갖고 있으므로 지역의 생활문화를 바탕으로 무대예술화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다. 전문 무용교육 기관에서는 전문 무용단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무용교육이 시행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교육체제에도 현장의 요구에 따라 변화가 생길 것이다. 전문 무용단체를 활용해 인력의 수급과 운영, 그리고 콘텐츠의 활용이 자연스러운 선순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무용분야는 종사하고 향유하는 인구의 수가 타 예술 장르에 비해 가장 적은 분야이다. 순수예술에 대한 열정을 간직한 채,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진부한 주장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생활문화와 더불어 무용계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 성공사례를 선보이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V. 맺음말

이상 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무용계에 의미하는 바를 제안하였다. 압축적 성장을 해온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문화예술이 삶에서 지니는 가치는 간과되거나 유흥과 차별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저성장 시대에는 자기의미를 추구하는 삶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내수시장이 작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국민에게 미치는 공공 문화예술정책 방향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

무용사를 돌이켜볼 때, 대중무용과 궁정무용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왔고 상업무용과 순수무용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4차를 넘어 5차 산업이 일자리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는 시기일지라도, 무용계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삶'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라는 것과 그 삶과 유리되어본 적이 없는 '춤의 본질'은 무엇인가이다.

현 세대의 삶과 유리되지 않은 춤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전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문화예술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협치의 장에 전략적으로 참여하고, 무용 무대와 문화예술교육에서의 기회 확대를 추구하고, 체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기관과 현장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http://pmo.go.kr/pmo/inform/inform01_02a.jsp (2017. 11. 10. 검색)
- 김중순 (2001). 지방재정학, pp.114-120.
- 김중휘 (2017).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혁신과제. 새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문화사회를 향한 정책과제 토론회 자료집, 39-56.
- 미리엄 웹스터 사전 (2017. 11. 15. 검색). Arm's length 검색.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arm's%20length>.
- 연합뉴스 (2017. 08. 16. 기사). 韓노동시간 OECD 2위…獨보다 1달 더 일하고 임금은 7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5/0200000000AKR20170815071000002.HTML> (2017. 11. 15. 검색)
- 연합인포맥스 (2017. 08. 01. 기사) 시사용어: 팔 길이 원칙 검색.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5201>. (2017. 11. 15. 검색)
- 이규석 (2017). 문화예술 지원구조의 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들. 새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문화사회를 향한 정책과제 토론회 자료집, 19-30.
- 이동연 (2017). 문재인 정부, 문화정책의 대개혁이 필요한 이유. 경향신문(2017.05.11.)
- 이원재 (2017). 새 정부 문화공약 분석 및 문화정책 혁신을 위한 기본 방향. 새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문화사회를 향한 정책과제 토론회 자료집, 1-18.
- 정부24 (2017. 11. 27 검색). 문화예술지원 키워드로 검색. <https://www.gov.kr/search/svc/main?srhQuery=%EB%AC%B8%ED%99%94%EC%98%88%EC%88%A0%EC%A7%80%EC%9B%90&pageIndex=6>
- 진달용 (2017). 새 정부 문화정책 방향은 ‘불간섭’, ‘공정’, ‘디지털’. 서울신문(2017.05.30.)
- 최승훈 (2017). 대중문화산업 생태계의 형성과 진화를 위한 정책 과제들. 새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문화사회를 향한 정책과제 토론회 자료집, 31-38.
- 정향미 (2017).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추진 현황과 과제.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 자료집.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문화예술정책 현황진단 연구, p. 187.
- Baumol, W. J., & Bowen, W. G. (1966). *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New York: The Twentieth Century Fund.
- Niskanen, William A. (1994). *Bureaucracy and Public Economics(second ed.)*. Brookfield, Vermont: Edward Elgar Publishing Company.

ABSTRACT

The Direction of Current Government's Culture Arts Policy and Suggestions for Dance Society

Park, Jae-Hong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what dance society needs to do in the direction of the current government's culture and arts policy. Many of culture and arts region request the current government to 'recover fairness of public subsidies', 'establish governance in culture and arts administration', 'secure artists' welfare', 'foster cultural democracy', 'lengthen recreation time of citizen', and 'make the budget for culture and arts'. The current regime's culture and arts policies published aims 'Age of life culture that people enjoy culture daily at their residence', 'guaranteeing the rights of artists through reinforcing creation environment and welfare', and 'improving public service equality of subsidy system'. In this atmosphere of culture and arts policies suggestions to develop dance society are as below. Firstly, dance society needs to participate in governance forum held by government and suggest strategically what dance society needs. Secondly, dance artists need to understand the shift of perspective in life culture and seek for jobs derived from culture and arts education by lifespan and participants. Lastly, dance society needs to establish the virtuous circle between dance education institutions and professional dance companies for broadening dance province.

Key words : culture and arts policy, culture and arts education, suggestion for dance society, virtuous circle for dance society

논문투고일: 2017. 12. 04
논문심사일: 2017. 12. 19
심사완료일: 2017. 12. 19